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이 결선 국면에 들어섰다. 민주당 경선은 김영록 후보와 민형배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되며 정책 경쟁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선거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의 산업과 재정, 행정 구조를 결정짓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전략과 함께 전남 의대 설립, 주청사 배치,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이 공약에 포함되면서 정책 방향과 실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는 결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통합 이후 전남광주특별시의 정책 구상을 짚어본다.



“에너지·AI·첨단 결합 미래 성장 모델 구축”

김영록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결선에 오른 김영록 예비후보의 공약은 ‘통합 이후 산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전면에 내세우며, 전남·광주 통합을 계기로 지역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 후보가 밝힌 1호 공약은 반도체 산업 전 주기 생태계 조성이다. 단순 생산시설 유치에 그치지 않고 설계, 소재·부품, 후공정, 테스트, 인력 양성까지 아우르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의 AI·데이터 인프라와 전남의 부지·에너지 기반을 결합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분산시키고, 서남권에 새로운 반도체 거점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전력 공급이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기반을 반도체 산업과 연계하겠다는 점이 강조된다.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전남의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도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연계된 교육·연구 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반도체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이 같은 반도체 공약은 통합 재정 운용 계획과 맞물려 구체화된다. 통합 재정 인센티브를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입, 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 구축, 기업 유치 지원, 연구개발 투자 등 핵심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 단기간 내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재정 투입 방식 역시 선택과 집중이 핵심이다. 생활SOC나 단기 사업에 분산하기보다 산업 인프라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우선 배분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와 에너지, AI 산업을

1호 공약 반도체 생태계...통합 청사진 구체화 20조 인센티브 적재적소 활용...전략산업 육성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를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산업 공약은 반도체 전략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전남의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기반으로 대규모 전력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첨단 제조 산업에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단순 전력 생산에서 벗어나 산업과 직결된 에너지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 유치 전략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반도체와 에너지, AI 산업을 중심

행정체계 개편 공약에서는 주청사 배치 문제가 핵심으로 포함됐다. 특정 지역이 기능을 집중하는 구조를 피하고, 기능별 역할을 나누는 방식의 행정 재편이 주요 방향이다. 정책·산업 기능은 광역 단위에서 통합 운영하고, 생활 밀착 행정은 권역별로 분산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주청사와 관련해서는 단일 중심 체계가 아닌 복수 거점 체계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행정 기능과 산업·정책 기능을 분리하거나 권역별 거점을 구축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균형발전 전략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 산업 축과 신안·해남 등 서남권 재생에너지 거점을 연결하고, 이를 광주의 AI·데이터 산업과 결합해 권역 간 산업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 기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권역별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산업 거점 간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항만과 공항, 철도

주요공약

- 주청사, 공론화 결정...광주·남양·동부 모두 이용
- 전남 국립의대, 목포대·순천대 자율 결정
- 재생에너지 활용 안정적 전력 공급망 구축
- 산단 조성·기반시설 구축·기업 유치 지원 노력
- 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 기관 집중 유치
- 여수·광양 등 동부권 산업 경쟁력 향상 총력



으로 대기업과 핵심 공공기관을 동시에 유치해 산업 집중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후속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에너지·환경·데이터 관련 기관을 집중 유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전남 국립과대학 설립 공약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전남의 현실을 고려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이다. 특히 권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과 진료 기능을 함께 갖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점이 강조됐다.

를 연계한 물류 체계를 구축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업 유치와 산업 집적을 위한 기반 인프라로 제시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생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가공·유통·에너지와 결합한 산업화 전략이 포함됐다. 전남 농업을 식품 산업과 바이오, 에너지 산업과 연계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향이다. 동시에 식량 생산에 대한 공공적 가치 보상 체계를 마련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시민주권 정부 수립 대한민국 성장축 도약”

민형배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전남과 광주의 통합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 강조한다. 광주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3.8%에 불과하고 지방채는 2조원에 육박하며, 전남은 22개 시·군 중 20곳이 인구소멸 위협지역이기 때문에 전남과 광주가 힘을 합쳐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 속 지역의 활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가 구상 중인 통합특별시는 단순히 행정 규모가 커진 도시가 아닌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는 도시다. 그 방향을 명확히 설계하기 위해 통합의 다섯 가지 원칙을 세웠다.

우선 성장통합이다. 전남의 에너지와 자원, 광주의 AI와 산업 역량을 결합해 AI·에너지·우주·바이오·반도체 등 신산업이 연결된 거대한 일자리와 소득 생태계를 만들 구상이다.

균형통합도 중요하다. 전남과 광주 어느 한 쪽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농산어촌과 섬 지역에는 우선 지원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소득 원칙도 빼놓을 수 없다. 고용 불안과 소득 격차에 대응해 시민의 최소 소득을 보장하고, 청년의 도전과 창업, 교육 기회를 넓히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만들 구상이다.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전략을 기반으로 전남·광주를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하는 도시로 육성하고 시민주권통합 원칙을 통해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든다.

특히 민 예비후보는 새로운 통합특별시를 떠날 때 다섯 개의 거점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민 주권을 꼽는다. 시민이 통합의 내용을 채우고 시민이 통합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통합만이 지속 가능한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때문에 1호 공약으로 ‘시민주권 정부 수립’을 내걸었다.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

의사결정 시민 참여 제도화 ‘열린 행정’ 구현 산업용 전기 100원 실현...글로벌 기업 유치

을 시민에 두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민주당의 ‘당원주권’에 이어 ‘시민주권’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기업 유치에도 집중한다. AI, 반도체, 모빌리티 중심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지역의 산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RE100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전력망’을 통해 ‘산업용 전기 100원 시대’를 열어나간다.

그가 도입하려는 분산형 전력망은 태양

자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에너지 고속도로와 함께 부산·여수·해남·광주를 잇는 ‘AI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해 에너지와 데이터가 결합된 첨단 산업 인프라도 완성해 나간다.

민 예비후보는 7월 출범할 전남광주특별시의 균형발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때문에 하나의 중심도시에 집중하는 방식이 아닌 동부·서부·중부·광주권역으로 역할을 나누고 성과를 순환시키는 구조로 설계할 방침이다.

먼저 동부권은 여수·광양 국가산단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제조 전환과 수출 산업이 결합된 대한민국 남부권 신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국토 남부권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설치해 우주항공, 첨단 제조, 미래 소재 산업 등 국가 신산업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산업 전환을 총괄하도록 계획한다.

서부권은 목포·신안·영광을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기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수도이자 글로벌 관련 산업권으로 발전시킨다.

중부권은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농생명·바이오 산업과 치유 산업이 결합된 친환경 생활경제권으로 육성, 농촌 지역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산되도록 할 구상이다.

광주권은 AI와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표 AI 실증 전진도시이자 스마트시티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국가 인공지능 혁신진흥원과 AI데이터청을 유치해 서비스 전반에 AI가 적용되는 미래 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권역별 균형발전을 통해 민 예비후보는 제조·에너지·농업·문화가 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그 성장의 성과가 시민의 삶으로 돌아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주요공약

- 시민주권 정부 운영으로 행정 혁신
- 전면적 행정 투명화·디지털 민주주의
- AI·반도체·모빌리티 글로벌 기업 유치
- 산업용 전기 100원 체계·AI 고속도로 구축
- 대한민국 대표 문화수도 조성
- 농어촌 소득 구조 개편 ‘마을월급 프로젝트’



광 발전과 ESS 저장 전력, 기존 계통 전력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를 전력 포트폴리오로 구성했을 경우 연평균 전력 단가가 83원 수준까지 낮춰지며, 운영비와 예비비 등을 포함하더라도 100원보다 낮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또 한가지 조건으로 그는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부터 거래까지 전담하는 플랫폼인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특구를 활용해 기업에 값싼 RE100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첨단산업과 대기업 투

프로필

김영록 후보는 전남 완도 고금도 출신으로 광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뒤 건국대 행정학과와 미국 시라큐스대 맥스웰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23세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곡성군청 수습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강진·완도군수, 행정자치

부 홍보관리관,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이후 18·19대 국회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거쳐 2018년부터 전남 지사를 맡아왔다. 행정과 정치, 중앙과 지방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김 후보는 전남의 미래 산업 육성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국립의대 유치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완도(71) △광주제일고 △건국대 행정학과 △美시라큐스대 맥스웰 대학원졸업 △민선 7·8기 전남지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제18·19대 국회의원 △전남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전남도 자치행정국장 △목포시 부시장 △강진·완도군수

프로필

민형배 후보는 해남 출신으로 전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목격한 뒤 민주주의와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인물이다. 전남일보 기자로 12년간 활동

하며 지역 현장을 취재했다. 이후 참여자치21 공동대표로 시민사회 운동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광주 광산구청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치발전·사회정책비서관을 거쳐 현재 21·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언론, 시민사회, 지방행정, 국정을 두루 거친 이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해남(65) △목포고 △전남대 사회학과 △제21·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사특별대책단장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K-이니셔티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사회정책·자치발전비서관 △노무현 대통령 사회조정비서관 △민선 5·6기 광산구청장